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 제 69회 한림원탁토론회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제 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지난 6월 1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농수산학부 정회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성장사업본부장, 문현팔 농수산학부 정회원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5.1%인

낮은 수준이며, 북한은 농정의 실패와 경제 파탄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식량자급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식량안보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제발표



이철호 박사
농수산식품부 정책위원
한국식량안보연구원 이사장

'통일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한반도 통일 초기 발생하는 식량부족 사태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쌀 120만 톤 비축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매년 60만 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이후 쌀가공 원료로 방출하도록 해야 하며, 비축쌀 60만 톤 중 40만 톤은 MMA 수입쌀로, 나머지 20만 톤은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의 증산과 자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저소득 빈곤층에게 쌀 쿠폰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며, 미국의 도정수율 현행 72%에서 68%로 낮춰 완전미 100%의 쌀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콩의 증산과 자금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식용 콩의 자금을 위해서는 남북한에서 약 62만 톤이 필요하며, 콩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해 남북한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축산의 합리화와 조사료 자금을 향상이 필요하다. 남한은 사료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옥수수 재배면적의 일부만 사료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사료 생산량을 확대해야 한다.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기술 현대화를 통해 연근해 어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수산업과 가공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협력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을 농업에 적용,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생산능력을 증대해야 한다.

● 지정토론



윤명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

남북 농업협력이 통일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남북한이 개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통일 이후의 농업에 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해 가야 한다.

안정적인 남북 농업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지속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농업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양돈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육과잉에 따른 축산분뇨 발생으로 환경피해가 문제되고 있지만, 북한은 사육두수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축산분뇨가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이 양돈부문에 협력해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규모 초과분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면,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면적의 신규 확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을 활용하여 이모작 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

● 지정토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통계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식량지원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식량소비의 증가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며, 중국의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외 곡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통일 대비 뿐만 아니라 당장 닥쳐올 식량부족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적 대책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 만큼 농업예산이 증가돼야 하고, 쌀 100%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준진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남북한 모두 식량자급률이 100% 미만인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의 배급 시스템과 비축미 마련을 위한 재원 소요도 큰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 1년에 한번 짓는 농사에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배급에 관련해서는 당장 시장체제로는 못갈 것이지만 어느 품목에서는 시장 체제로 가야한다.

통일이 된다면 사회 인프라 등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부문은 후순위로 밀리는 가능성도 있다. 식량이라는 부분이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이며, 식량문제 해결 없이 다른 어떤 산업도 커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남북 농업분야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여인홍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남북농업 협력은 다음과 같은 대원칙 하에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은 농업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일방적 퍼주기식이 아니라 계약 재배 등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것보다는 단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농업협력만으로 식량문제가 해결 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 국내 여론의 성숙도, 정부의 재원 조달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북한 농업협력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부의 재원 도달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큰 범위 내에서 농업개발 지원속도와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농업협력사업의 세부 내용 마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게 하는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유흥식 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성및사업본부

● 지정토론



문한밀 박사
농수산학부 정회원
한국농지보원 이사장

통일 이후 남북한의 생산기반과 지리·환경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반도의 식량생산자급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북한지역의 주곡을 쌀로 전환해 식량의 질적 안정을 꾀하고, 북한지역 옥수수 생산영역을 식용 콩과 사료생산영역으로 전환해 남한의 곡물 해외 의존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의 식량생산 접근방향은 무엇보다 주식인 쌀의 완전자급 유지가 요구된다. 문순 은대지역에 속하는 한반도에서 5천년 역사와 함께해온 쌀은 자연이 부여한 주식 작물로서 지리적·기상적 여건으로 볼 때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작목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한반도의 쌀 생산환경과 기술적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주곡인 쌀의 완전 자급을 위해 생산면적의 유지확대보존이 필요하다.



김용태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120만 톤 비축을 명시하지는 법제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만, 모든 비축물량을 쌀로 할 것이 아니라 쌀은 50~70% 정도 비축하고, 나머지는 콩이나 옥수수를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과 같이 특별농업지구를 설정하고 남북한 공동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된 적이 있고 최근 개성공단의 사태에서 보듯이 그 시행에도 많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공동농업지구 설정보다는 오히려 현재 신정부의 북방정책 강화를 기점으로 3각 농업개발협력사업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